

정상회담 열린 비무장지대, 세계적 '평화관광지'로 조성

정부 국가관광전략회의 개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입력 : 2018.07.11 14:00

이기사주소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8071107514416094&type=1> [복사](#)



정부가 휴전선 인근 비무장지대(DMZ)를 전세계인들이 찾는 평화 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정부는 11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해외에도 널리 알려졌고, 다양한 생태 자원까지 갖춘 비무장지대를 세계 유일의 '평화관광지'로 브랜드화한다는 계획이다.

접경지역 10개 시·군 일대는 '한반도 생태평화벨트비무장지대'로 조성된다. 또 비무장지대 인접지역엔 걷기여행길과 자전거길을 조성한다. 문화관광축제, 국제자전거대회(Tour de DMZ), 평화역사이야기여행 등 평화관광 프로그램도 구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유관 지방자치단체, 관광공사 등과 '비무장지대 평화관광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한다.

정부는 강원지역은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개최지 명성을 활용해 '겨울·스포츠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남해안에도 관광루트를 조성한다. 섬·바다·갯벌 등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해 내외국인이 찾는 관광 섬을 육성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공공기능을 연계한 '스마트시티형' 관광레저도시를 육성하겠다는 것.

아울러 국가 중요 농업유산은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명품 숲 50개를 발굴하는 것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관광 육성 추진 체계와 관련, 정부는 지역의 관광 역량을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계획하고 중앙정부는 단계별로 지원·컨설팅을 하는 '계획공모형 관광개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관광이 활성화돼 늘어난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주민, 업계를 아우르는 지역관광추진기구 설립도 지원한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공항을 활성화하고 호남고속철도 2단계를 조속 추진하는 한편 근로자 휴가 지원제도 등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국내 여행이 증가하고 한국 방문 시장이 회복되는 등 관광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 지역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역의 관광 경쟁력을 높여 관광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